

들썩이는 정계개편...술렁이는 지방정가

국민의당 지방 의원들 바른정당과 통합설에 탈당 움직임

내년 지방선거 앞 닳은 지지율·보수 성향 부담...분당 우려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국민의당의 최대 지역 기반인 광주·전남 지역정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의석 18석 중 16석이 국민의당 소속이지만, 지역 국회의원 개개인 별로도 통합에 대한 찬반이 확실하게 구분되면서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들도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민의당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명분이 없다'는 반대의 뜻을 확실하게 세우고 탈당까지 감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최대 기반인 광주·전남에서도 당 지지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물면서 최근 당을 떠나는 당원과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이 짙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탈당 러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호남 배제 방침 등이 알려지면서 바른정당과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의당 지방의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지방의원들과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 당을 떠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명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통합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자칫, '국민의당-민주당 통합파'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파' 등으로 당이 쪼개지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회 발(發) 정계개편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중앙당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지율도 낮은 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뭐겠느냐?"라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2년이 남았지만, 당장 우리는 8개월 뒤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도 지역 의원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통합 반대 단체 성명 등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후폭풍은 고스란히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계개편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도 분주해진 모습이다. 국민의당 탈당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민주당행을 선택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의 섣불리는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후보들이 무소속이나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선거에 나온다면 선거 판세가 더욱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 효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무난한 선전이 예측됐지만 국민의당-바른정당 간 통합에 따른 정계개편이 향후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네가 나가라”

한국당 진흙탕 싸움

탈당 권유에 친박, 洪 퇴진 촉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 핵심 의원들이 22일 서로 퇴진을 촉구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탄핵 사태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정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사실상 출당 절차인 '탈당권유' 징계 결정을 내리자 두 의원이 “물러날 사람은 홍 대표”라며 홍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하던 서다. 양측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들춰내며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막말도 서슴치 않는 등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대표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홍 대표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대표직을 사퇴하기 바란다”며 “알량한 법 지식을 활용해 흑세무만하고 내로남불식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홍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성완종 리스트'를 거론하며 “야당 대표로서 결격 사유”라며 “성완종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는 폭로까지 감행했다.

홍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홍 대표는 서 의원의 사퇴 요구에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며 “노숙, 노후로 비난받지 마시고 노(老)정경계급에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시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의원을 향해서는 지난 21일 폐백에 글을 올려 “공천 전횡으로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를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출당에 저항하는 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김형호기자 khh@



서울대 모의국회에 간 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모의국회 간담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후반전...여야 적폐대결 총력

보수정권 방송장악 의혹·탈원전·안보 정책 쟁점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반환점을 돌아 이번 후반전에 돌입한다.

여야 4당은 남은 국감에서도 주도권 쟁탈전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가 각각 방점을 찍은 '적폐 청산'과 '신(新)적폐 저지' 대립 구도는 국감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 후반전에서는 방송장악 의혹, 탈원전 정책, 안보정책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쟁점으로는 이전 보수정권 9년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을 들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27일에 각각 열리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날뎠다 드러내고 공정성 회복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시키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파헤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위의 한국전력공사(23일)·한국수력원자력(24일) 국감에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과 탈원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국론 분열이 컸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국민의당은 특히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은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책 소통 면에서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공세를 막아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4대 강 사업이나 국정교과서와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공론화라는 '속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민주당의 대응 논리다.

한편, 청와대의 한법제관소장 지명이 계속 미뤄지면서 현재 국정감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현재와 국회 관계자들의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현재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한 국감 재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감 브리핑

이개호 “농산물 가격안정 위해 계약재배 확대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협이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사업을 개선·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최근 계약재배와 생산안정제 사업 물량이 줄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 효과는 물론 농산물가격 안정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따르면 농협은 무·배추·고추·마늘·양파·대파·당근·감자 등 8개 품목에 대해 계약재배 사업을 시행 중인데, 최근 4년간 전체 생산량 대비 계약재배량이 2013년 11.3%에서 2016년 8.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안정제 사업 역시 농산물 품목 수가 4개에 불과한데 전체 생산량 대



비 생산안정제 물량이 8.6%에 그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의원 설명이다. 생산안정제 사업은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계약재배의 경우 매년 인산되는 영농자재와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낮은 계약단가 때문에 농민들이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파의 경우 2013년 1만7703농가에서 2016년 6655농가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무이자 선도금과 인센티브 지급, 종자공급과 자조금 활성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석 “광주교육청 못받은 학교용지부담금 686억”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2일 “광주시교육청이 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교육청이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청이 해당 자치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금은 총 5966억원이다.

자치체 별로 받아야 할 미전입 금액은 대구교육청이 총 704억원(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광주교육청 686억원(7.9%), 인천교육청 490억원(15.5%)경기교육청 484억원(1.9%) 순이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



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학교용지법)에 따라 신규 주택 단지를 건설하면서 필요한 신선헌학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신선헌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는 제도이다.

송기석의원은 “자치체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비용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교육청에 전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황주홍 “농약·비료 등 농가 영농비 절감 시급”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취임사에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약속한 만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인하를 통한 농가 영농비 절감이 시급하다”며 농협을 상대로 농자재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은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업경영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농약이고, 농약 가격은 중앙회가 제시하는 기준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농협중앙회가 선도적으로, 파격적으로 농약기준 가격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은 “농가소득은 2007년 3197만원에서 2016년 3720만원으로 34만원



감소했지만, 농약비 등 농업경영비는 1570만원에서 2121만원으로 551만원(74%) 증가했다”며 “농업경영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비료비와 농약비로 농약 가격 인하 없이 농가영농비 절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농약 가격은 매년 초 농협중앙회가 농약구매 기준 가격을 정하면, 개별 단위 농협이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와 가격협상을 하는 방식”이라며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